

# 전두환, 광주 5·18재판 재출석할까

### 오늘 사자명예훼손혐의 9번째 공판 기일서 결론

### 골프·호화식사 논란에 5월단체 즉각 구속 촉구

건강 등의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법정 재출석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16일 열리는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의 9번째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항공단장 손모씨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전씨의 법정 재출석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골프장 논란이 제기된 전씨의 재출석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16일 열리는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월23일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씨 핵심 측근인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전날 '12·12 반란 자축 오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

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변호인에게 위임한 것은 법정에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로는 정상적인, 의미있는 진술은 어렵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에 문제가 있고 증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부인의 도움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골프는 권장할만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있으면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장 논란에 이어 12·12 사태 주역들과 호화점심을 즐겼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5월 단체 등은 전씨의 법정 재출석은 물론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등은 성명서 내고 "전씨가 최근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데 이어 군사반란 주역들과 함께 강남 고급식당에서 기념오찬을 하는 장면이 또 다시 목격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피병으로 재



정의당은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당일인 이날 쿠데타 주역인 나희 멤버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달하는 고급 점심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임한솔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쿠데타 주역들과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고급 코스요리를 즐기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했다"고 말했다.

판을 회피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며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패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과격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달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담

긴 동영상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골프장에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5·18에 대해 묻자 전씨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5·18 광주학살의 책임이 있는 정호용, 최세창씨 등과 부부동반으로 호화점심을 즐기며 올해 40년이 되는 12·12 군사반란을 자축한 사실까지 드러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이슈판결

### 노출 심한 옷 입고 여고생 개인교습 50대 강사 실형 법원 "노출장애 인정되지만 인격발달 저해 우려 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10월25일까지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양(17)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15분쯤 B양과 통화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노출장애가 있음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이물질 삼켜 교도소 이송 차질 수감자 징계 정당

#### 광주지법 "교도소 내 규율 저해 행위·엄격한 처분 필요"

교도소에서 이물질 삼켜 이송에 차질을 빚게 한 수용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목포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교도소에 있던 A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예정된 지난 3월 12일 견전지 조각과 핀셋을 집어 삼켰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이물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해 목포교도소로 환송됐다.

목포교도소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지 30일 처분을 했다.

A씨는 "어떠한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 취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물질 취식행위로 교도관이 A씨를 이송하는데 방해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목포교도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80대 환자 폭행 요양보호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 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를 한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이후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발생 경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한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B씨(86·여)가 넣은 우유를 누가 버렸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전남시민단체 "행동강령조례 위반 도의원 중징계해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남 도의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에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도의

원회 소속 A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는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전심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도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정활동은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하고 무시한 처사이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전남도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 의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도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꾸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살펴보고,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의원의 상임위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도 해당 의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성은 기자

"배우자 어린이집 운영 불구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 참여"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 회피해야...전체 의원 대상 조사"

원의 즉각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4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

하며 예산안 심사에 까지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